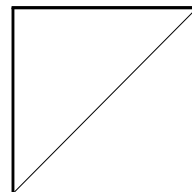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83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1. 18. (제 20 차)

의
결
사
항

산와대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연월일	2020. 11. 18.

1. 의결주문

산와대부(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과태료 부분에 대한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산와대부(주)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리인 선임 통지서 수령 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금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산와대부(주)에 대하여 영업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제1항 및 제17조(과태료)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8.5. 법률 제16957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과태료) 제4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1항 및 제2항, <별표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8.12. 시행령 제30934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및 제19조(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0차 제재심의위원회(2020.9.17.) 심의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관련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토록 함

<별지>

산와대부(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산와대부(주) : 2020. 11. 23.부터 2021. 2. 22.까지 영업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19백만원 부과

- 정지 업무 :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신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 금지*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일부정지 기간에도 다음 업무는 허용

- 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금의 수령
- ②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한 단순정보(연체사실, 연체금액, 계좌번호,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안내
- ③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전 채무이행지체사실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의 통지

2. 조치사유

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산와대부(주)는 2016.10.31.~2019.4.29. 기간 중 ○○○ 등 5명의 채무자로부터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채무와 관련하여 동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 방문 2회, 전화 5회, 우편 2회, 문자메시지 8회 전송

< 관련법규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7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나.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산와대부(주)는 2016.1.1.~2019.5.31. 기간 중 연체채무자 14,835명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등록(11,233명)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해제*(3,602명)한 사실이 있음(검사종료 후 연체정보 수정 완료)

* 연체대금중 일부만 납입되었는데도 연체정보를 해제처리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8.5. 법률 제16957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8.12. 시행령 제30934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및 [별표4]

관 계 법 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나. ~ 라. (생략)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 2.~6. (생략)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생략)
- ②~③ (생략)
-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2분의 1로 감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 2천만원
- 2.~3.(생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차수에 따른 처분을 한다
- 나. 과태료 금액이란 중 괄호 안의 금액은 과태료 대상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말한다(법제17조제4항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가.~라. (생략)				
마.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200	500	1,000
바.~더. (생략)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⑥ (생략)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별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생략)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조 (생략)				
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코.~수. (생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 14.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⑦ (생략)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8.5. 법률 제16957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③ (생략)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신용조회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⑤ ~ ⑥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 14.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⑥ (생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의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하. (생략)		
거.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5항제5호	1,000
너.~녀. (생략)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8.12. 시행령 제30934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및 [별표4]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18. (생략)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20.~28. (생략)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1.>

④~⑧ (생략)

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⑩~⑪ (생략)

[별표 2](일부 발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21조제3항 관련)**

I. 개인

구 분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
다. 신용도판단정보	1)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시설대요 이용료등의 연체 사실 2)~6) (생략)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의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카. (생략)		
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5호	1,000
파.~느. (생략)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①~② (생략)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생략)

[별표 6]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4조의2제2항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

1. ~ 2. (생략)

3. 신용도판단정보 (표 일부 발췌)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대출금 등의 연체 현황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 해당 개인 ○ 해당 기업 및 법인 ○ 관련인	신용정보집중관리 위원회가 정함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4. ~ 6. (생략)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일반신용정보”란 이 규약에 의하여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를 말한다.
3. (생략)
4. “금융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 4의2~ 12의2. (생략)
13. “연체”란 원금(분할상환금을 포함한다)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4.~15. (생략)

제7조(신용도판단정보) ① 신용도판단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해당 일반신용정보의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 연체정보
- 2.~7. (생략)
- ②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해당 정보의 관련인정보를 포함하여 이하 “연체정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은 연체기산일로부터 별표 1의 등록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등록사유발생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한다.
 - 2.~6. 생략

<별표 1>

신용정보 관리기준

- 1.~2. (생략)
3. 신용도 판단정보
 - 1) 연체정보 (표 일부 발췌)

구분	등록사유	해제사유	등록시기
대출금 연체	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채무자변제”라 한다)(01) 가. 채무자(관련인을 포함한다)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기일경과어음미결제정보, 무보증회사채상환불이행정보, 무담보미수채권정보는 제외한다) 나. ~ 마. (생략) 2.~19. (생략)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제13조(관리기관) ① 금융기관은 일반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전산망을 통하여 신용정보원에 해당 일반신용정보를 등록·해제·정정·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하여 일반신용정보를 등록·해제·정정·삭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용정보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미수발생정보,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정보를 제외한 일반신용정보는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신용정보정정요청서」로, 기업신용공여정보는 <별지 제4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 <별지 제5호 서식> 「기업어음거래상황표」로 등록·해제·정정·삭제할 수 있다.

② (생략)

□ 舊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 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라.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하며, 나.(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 (4) (생략)

나. 감경 사유

- (1) ~ (2) (생략)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 (9) (생략)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 (6)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생략)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 바.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부칙 <제2017-38호, 2017.10.19.>

제2조(과태료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산와대부(주)*

* 대표자 : 김선이

등록번호 : 2016-금감원-0002(대부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6층(봉천동)

2. 제재조치일 : 2020. 11.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영업 일부정지* 3월, 과태료 19백만원 * 영업 일부정지 기간 중 발생한 신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정지
임 원 (3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2명
직 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산와대부(주)는 2016.10.31.~2019.4.29. 기간 중 ○○○ 등 5명의 채무자로부터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채무와 관련

하여 동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 방문 2회, 전화 5회, 우편 2회, 문자메시지 8회 전송

< 관련법규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나.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산와대부(주)는 2016.1.1.~2019.5.31. 기간 중 연체채무자 14,835명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등록(11,233명)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해제*(3,602명)한 사실이 있음(검사종료 후 연체정보 수정 완료)

* 연체대금중 일부만 납입되었는데도 연체정보를 해제처리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다.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게 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산와대부(주)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2019.1.2.~2019.1.22. 기간 중 지점 책임자 등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74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16.3.12.~2019.6.30. 기간 중 상거래관계의 종료 후 3개월이 경과되어 삭제하여야 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205,641건을 삭제하지 않았음(2019.7.26. 삭제 완료)

* 결혼구분, 주거입주일, 병역유무 등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계금융과	여신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513	02-3145-8272